

기업인 대상 최신 반부패 정책 자료집(2023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기업의 청렴·윤리 경영 문화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신 주요 반부패 정책 자료집을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주요 내용 (총 5건)

- ①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제도 세계에 알린다('23.6.12)
- ② 지난해 하반기 보조금 등 부정수급 739억 원 환수, 90억 원 제재 부가금 부과('23.6.23)
- ③ 법조계·경제계 전문가와 '기업 위한 청렴윤리경영' 간담회 개최 ('23.6.21)
- ④ '적극행정국민신청' 2년간 6천5백여 건 접수('23.6.21)
- ⑤ '소상공인 경영 고충' 상담받습니다!('23.6.19)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정책·정보 → 부패방지 자료실 → 청렴정책)

■ 문의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정책총괄과(044-200-7619)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제도 세계에 알린다

189개 당사국 참여하는 유엔반부패협약 회의에서 반부패 정책 공유

(23. 6. 12. 국민권익위)

이번 달 12일부터 16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리는 유엔반부패협약 회의에서 189개 당사국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제도 등 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을 소개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유엔반부패협약 제14차 이행점검협의단(Implementation Review Group)과 제14차 부패예방실무협의단(Working Group on Prevention)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을 공유하고 국제 반부패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유엔반부패협약(이하 협약)은 민주주의·윤리적 가치·정의를 훼손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법의 지배를 위태롭게 하는 부패를 척결함으로써 세계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제협약으로, 현재 189개 당사국이 참여하고 있다.

2010년부터 매년 열리는 회의에서는 협약 당사국, 국제기구 반부패 전문가들이 참석해 그간의 이행 현황을 공유하고 이행점검 절차 및 효과적 이행을 위한 기술지원을 검토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5월 유엔반부패협약 2주기 이행점검 요약보고서가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누리집에 게재됐다.

이번 회의에서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제도를 발표한다. 기존의 평가체계를 통합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모형과 이에 따라 실시된 지난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등에 대해 국제사회와 공유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반부패 정책 효율성 평가 모범 사례, 부패 예방적 접근법과 법 집행 접근법의 관계 등 주요 의제에 대해 논의한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189개 당사국 전문가들이 모이는 유엔반부패협약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종합청렴도 평가 제도 등 우리나라의 우수한 반부패 정책을 적극 알리겠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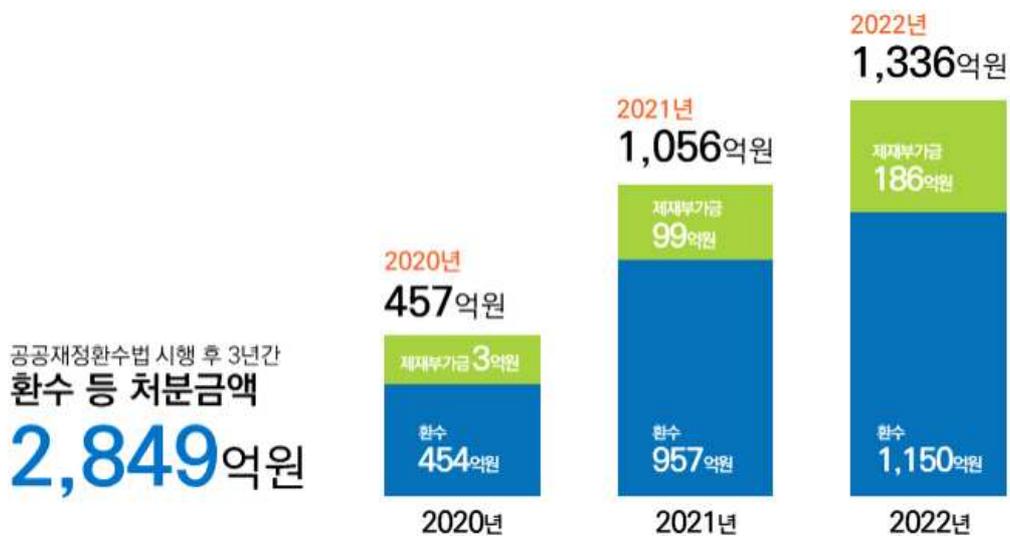
지난해 하반기 보조금 등 부정수급 739억 원 환수, 90억 원 제재부가금 부과

신고자 포상금 지급액 2억→5억 원, 국민권익위 외 타 기관 신고 보상금 지급 확대 등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개정 추진

(23. 6. 23. 국민권익위)

308개 각급 공공기관은 지난해 하반기 보조금 등 부정수급 739억 원을 환수하고 90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환수·제재부가금은 총 1,336억 원으로 2021년 1,056억 원 대비 27%가 증가했다.



또 보조금 등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 포상금 지급액을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

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 등 제재 처분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23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청구한 경우 부정 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보조금, 지원금 등 법령·자치법규에 따라 반대급부없이 제공하는 금품 등
**허위 청구(5배), 과다 청구(3배), 목적 외 사용(2배) 제재부가금 부과

국민권익위의 점검 결과, 지난해 하반기 환수 처분된 금액은 739억 원, 제재부가금 부과금액은 90억 원으로 확인됐다.

기관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이 가장 많았고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순이었다.

* 환수: 494억 원(중앙) > 232억 원(기초) > 12억 원(광역) > 0.6억 원(교육청)
제재부가금: 83억 원(중앙) > 6억 원(기초) > 1억 원(광역) > 0.02억 원(교육청)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366억 원, 기초자치단체는 전북 남원시가 12억 원, 광역자치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4.7억 원, 교육청은 울산교육청이 0.2억 원으로 환수처분이 가장 많았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를 보면, ▲기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것처럼 속여 지원금 수령 ▲사회서비스 미제공자의 결제 등 허위 청구 ▲근무시간을 거짓으로 늘려 인건비 과다 청구 ▲보조금 잔액을 미반납 후 관내 업체에 장부를 만들어 목적 외 사용 등(붙임3 참조)이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법률상 제재부가금을 부과해야 하는데도 부과하지 않은 사례를 적발해 3분기 중 해당 기관에 이행을 권고하고, 취약·빈발 분야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적극 개선할 예정이다.

또 보조금 등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 포상금 지급액(2억→5억 원)을 상향 추진하고, 국민권익위 외의 타 기관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 * (보상금 사례) 국민권익위는 평가등급, 근무직원 수 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약 4억 4,000만 원 지급
- * (포상금 사례) 국민권익위는 보조금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제출해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1,400만 원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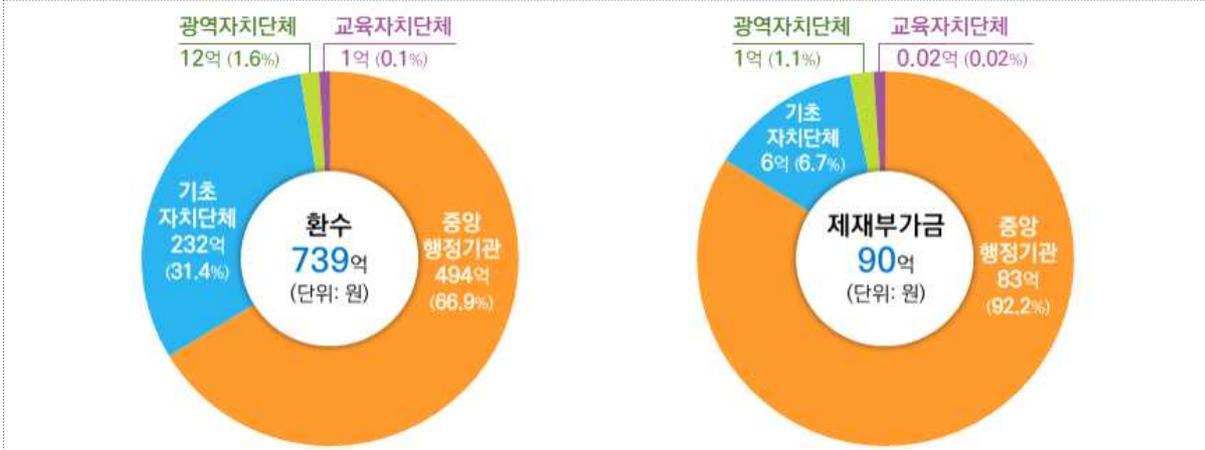
이와 함께 각급기관의 환수·제재부가금 처분실적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의 '청렴노력도'에 반영하고 청렴포털(www.clean.go.kr)에 기관별·사업별 공공재정 현황, 부정수급 금액·비율, 지원금별 처분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정부지원금이 꼭 필요한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관리하고, 각급기관과 협력해 부정수급 근절 홍보 강화, 포상금 지급 확대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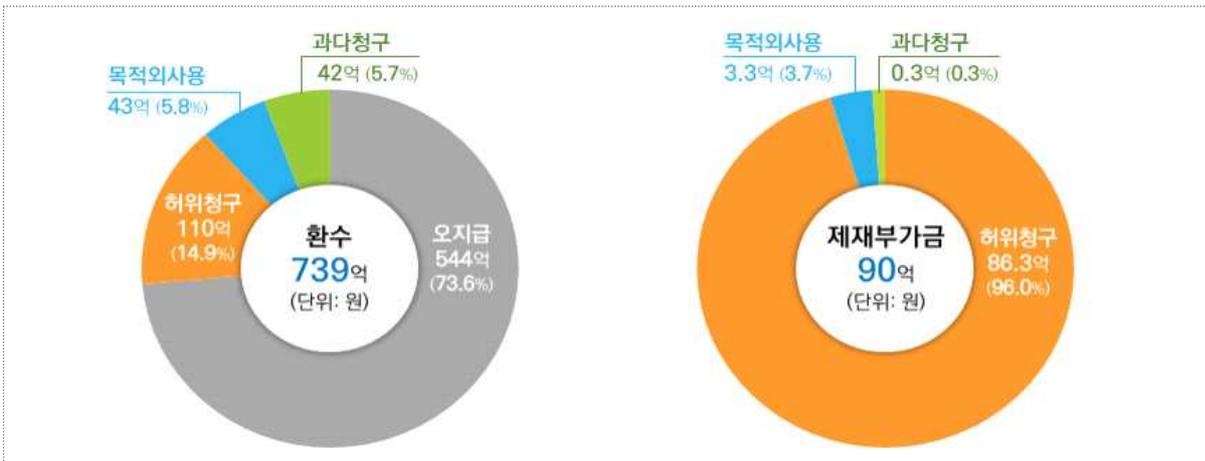
기관별 · 유형별 · 분야별 환수처분 현황

[그림1] '22년 하반기 기관유형별 환수 등 처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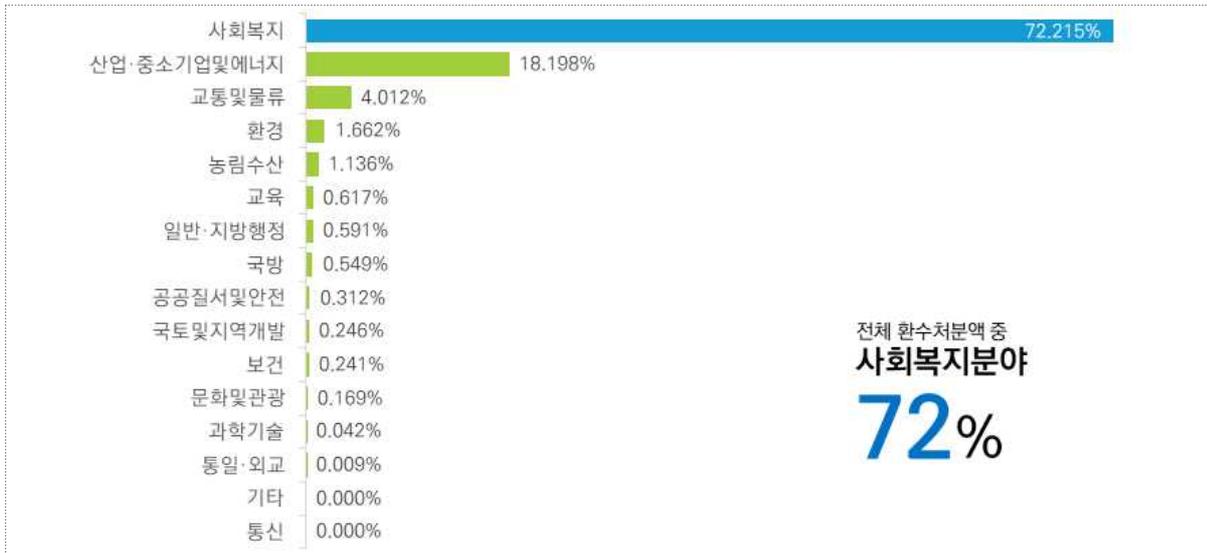
구분	예산액 (백만 원)	환수(백만 원)		제재부가금(백만 원)		지급중단 (건)	체납처분 (건)	명단공표 (건)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계	290,249,582	73,931	192,415	8,989	661	7,212	342	8
중앙	147,027,416	49,434	149,321	8,295	563	725	26	-
지방	118,300,094	24,434	42,922	691	97	6,487	316	5
광역	19,404,535	1,192	2,125	99	4	320	231	1
기초	98,895,559	23,242	40,797	593	93	6,167	85	4
교육	24,922,072	63	172	2	1	-	-	3

[그림2] '22년 하반기 부정청구 유형별 환수 등 처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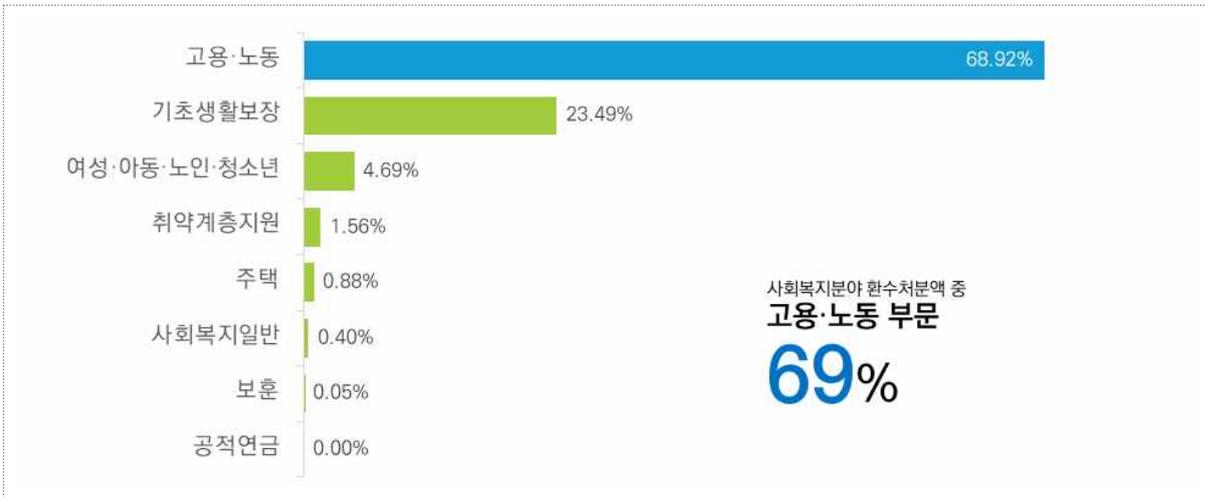
구분	환수(백만 원)		제재부가금(백만 원)		가산금 (백만원)	지급중단 (건)	체납처분 (건)	명단공표 (건)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계	73,931	192,415	8,989	661	50	7,212	342	8
오 지 급	54,412	172,654	-	-	9	2,562	267	-
허 위 청 구	11,016	9,316	8,629	629	12	2,501	27	7
목 적 외 사 용	4,258	1,241	334	29	28	413	29	1
과 다 청 구	4,245	9,204	26	3	1	1,736	19	-

[그림3] '22년 하반기 분야별 환수 등 처분현황



분야	예산액 (백만 원)	환수(백만 원)		제재부가금(백만 원)		지급 중단 (건)	가산금 (금액)	체납 처분 (건)	명단 공표 (건)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계	290,249,582	73,931	192,415	8,989	661	7,212	50	342	8
사회복지	93,709,713	53,389	178,949	8,436	588	6,049	15	288	4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61,288,182	13,454	3,897	183	11	10	-	-	-
교통및물류	16,559,910	2,966	2,208	90	1	971	9	29	-
환경	5,168,606	1,229	114	5	1	1	-	-	-
농림수산	16,365,699	840	1,244	212	51	58	2	3	1
교육	35,320,438	456	1,190	15	3	1	6	-	3
일반·지방행정	5,367,770	437	2,305	9	3	10	1	19	-
국방	4,552,547	406	62	5	1	-	-	-	-
공공질서및안전	2,571,423	231	273	-	-	1	-	-	-
국토및지역개발	1,513,436	182	454	-	-	75	-	3	-
보건	21,511,022	178	1,628	24	1	29	-	-	-
문화및관광	8,843,349	125	73	10	1	6	17	-	-
과학기술	8,955,441	31	14	-	-	-	-	-	-
통일·외교	2,126,194	7	2	-	-	-	-	-	-
통신	3,658,169	-	-	-	-	1	-	-	-
기타	2,737,683	0.3	2	-	-	-	-	-	-

[그림4] '22년 하반기 사회복지 분야의 부문별 환수 등 처분 현황



부문	예산액 (백만 원)	환수(백만 원)		제재부가금(백만 원)		지급 중단 (건)	가산금 (금액)	체납 처분 (건)	명단 공표 (건)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계	93,709,713	53,389	178,949	8,436	588	6,049	15	288	4
고용·노동 (고용안정장려금, 일자리창출지원 등)	14,275,075	36,798	144,238	8,322	561	710	8	24	2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 등)	12,016,249	12,541	24,211	9	1	3,951	1	264	-
여성·가족·노인·청소년 (한부모가족지원,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47,055,003	2,506	6,051	77	22	967	6	-	2
취약계층지원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10,510,653	834	1,674	27	3	220	-	-	-
주택 (주거급여, 청년월세지원 등)	1,150,696	471	1,877	-	-	75	-	-	-
사회복지일반 (코로나19생활지원비 등)	2,347,023	213	620	-	-	94	-	-	-
보훈 (명예수당, 보훈단체지원금 등)	6,209,265	26	278	1	1	32	-	-	-
공적연금 (연금기관 운영 출연금)	145,749	-	-	-	-	-	-	-	-

붙임 2

기관유형별 환수실적 최상위 기관의 세부사업별 현황

[표1] 고용노동부 주요 세부사업 환수실적 현황 명세

(단위: 천 원)

기관명	세부사업명	2022년 예산액	환수처분		제재부가금 부과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고용노동부	계	13,213,003,991	36,640,434	144,149	8,110,469	553
	일자리안정자금지원	338,624,000	28,906,202	108,089	15,600	4
	청년일자리창출지원	513,620,000	2,858,195	232	5,143,689	175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1,022,172,000	1,540,988	33,639	-	-
	국민취업지원제도	1,275,999,000	714,285	1,207	56,690	82
	청년추가고용장려금	994,760,000	653,965	76	1,181,660	66
	고용안정장려금 등 27개 사업	4,537,018,000	1,966,799	906	1,712,830	226
	그 외 126개 사업	4,530,810,991	-	-	-	-

[표2] 대전광역시 주요 세부사업 환수실적 현황 명세

(단위: 천 원)

기관명	세부사업명	2022년 예산액	환수처분		제재부가금 부과	
			금액	건수	금액	건수
대전광역시	계	933,836,448	422,388	10	-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456,827	422,228	1	-	-
	택시 재정지원	16,718,837	160	9	-	-
	그 외 1,808개 사업	916,660,784	-	-	-	-

[표3] 전라북도 남원시 주요 세부사업 환수실적 현황 명세

(단위: 천 원)

기관명	세부사업명	2022년 예산액	환수처분		제재부가금 부과	
			금액	건수	금액	건수
전라북도 남 원 시	계	412,021,645	1,226,378	109	-	-
	지역투자촉진	3,246,048	1,196,300	2	-	-
	기본형 공익직불제	30,500,000	20,089	61	-	-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지원	355,500	7,500	4	-	-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등 지원	1,055,962	1,500	3	-	-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 5개 사업	5,154,501	989	41	-	-
	그 외 1,334개 사업	371,709,634	-	-	-	-

[표4] 울산광역시교육청 주요 세부사업 환수실적 현황 명세

(단위: 천 원)

기관명	세부사업명	2022년 예산액	환수처분		제재부가금 부과	
			금액	건수	금액	건수
울산광역시 교육청	계	563,432	24	2	-	-
	사립유치원운영비지원	2,832	24	2	-	-
	그 외 1,159개 사업	560,600	-	-	-	-

※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실적은 각급기관의 업무추진 분야, 법률상 권한, 예산규모, 적극적 감사활동 여부 등에 따라 차이

붙임 3

주요 부정수급 사례

분야	부정수급 사례
사회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급여·주거급여 등) 가구원 변동, 소득신고 누락, 타 급여와 중복지급 등 · (사회서비스이용권) 사회서비스 이용자 서명 누락, 서비스제공 기록지 미작성, 제공인력으로 등록되지 않은 제공인력 ID로 결제 등 허위청구 ·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 파견근로자를 직접 채용한 것처럼 속여서 지원금 수급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지원 연구개발비) 허위 세금계산서 및 허위 연구자 등록을 통한 재료비, 인건비 및 연구비 목적외 사용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기간 동안 공공기관 고용유지지원금 및 고용장려금 이중수급 · (고용창출장려금) 실제 근무시간보다 근무시간을 거짓으로 늘려 인건비를 과다청구
교통 및 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대상 차량이 아닌 차량에 주유하거나, 폐업 상태에서 유가보조금 신청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자동차보조금) 전기자동차 구매 후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폐차하거나 타지역으로 매도함
농림해양수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직불금) 타인이 경작하는 농지에 대하여 부당하게 청구하여 수령 · (청년지원금)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지침에 의거한 의무사항(전업적 어업 경영 유지 미준수)을 위반하고 보조금 수령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지원금) 시·도교육청 평생교육사 인건비와 지자체 평생교육사 인건비를 한 명의 평생교육사가 이중 수급 · (맞춤형국가장학금)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한 것처럼 국가근로장학금을 수령 · (지역아동센터지원) 등록차량을 개인용으로 사용하면서 관련자료를 조작하여 유류비를 청구하여 수령

※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신원이 드러날 수 있어, 일부 사례의 경우 내용 각색

정부지원금 (공공재정지급금) 현황 (*'22년下 기준 환수·제재부가금)



정부 보조금, 지원금 등 법령·자치법규에 따라
반대급부 없이 제공하는 금품 등

- ▲ 정부지원금 : 290조 원
- ▲ 환수·제재부가금 : 829억 원



어린이



청년



어르신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운수사업자



연구개발(R&D)기관



기초생활수급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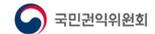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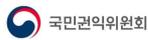


장애인



한부모가정





공공재정환수법 핵심내용



01. 공공재정지급금(정부지원금)이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또는 그 밖의 상당한 반대급부 없이 제공되는 금품등



02. 부정이익등 환수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 부정이익과 이자 환수



03. 제재부가금 부과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최대 5배 부과



04. 고액부정청구등 행위자 명단공표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① 제재부가금을 부과받은 환수가 2회 이상이고,
 ② 부정이익 가액 합계가 3천만원 이상인 고액부정청구등 행위자 대상



정부지원금, 잘 사용되고 있을까?

정부지원금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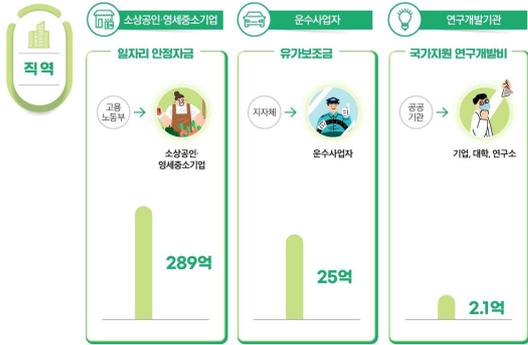


환수 등 처분 현황



정부지원금에는 어떤 것이 있고, 얼마나 잘못 사용되었을까?





4

부정청구등을 신고해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

신분보장
(공공재정환수법 제19조)

①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와 협조자에게 신분상 징계 해고 등 불이익 처분 불가
 ② 신고자와 협조자가 불이익 처분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치 요구 가능

비밀보장
(공공재정환수법 제20조)

누구든지 신고자와 협조자의 동의 없이 인척사항이나 신고자와 협조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공개 불가

신변보호
(공공재정환수법 제21조)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와 협조자,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이익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 요청 가능

책임감면
(공공재정환수법 제22조)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면제 및 신고 등과 관련된 신고자와 협조자의 형벌 및 징계 감경 또는 면제 가능

5

신고를 하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최대 30억 원)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로 부정이익등 환수와 체재부가금을 부과하여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 신청 가능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 최대
30억 원

●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포상금(최대 2억 원)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로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있다면 신고로 공익증진에 기여한 경우 등 조사기관 등의 추천을 받아 포상금 지급

부정청구 신고 포상금 최대
2억 원



6

부정청구등 신고는 어떻게 할까?

- 상담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 인터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www.clean.go.kr)



- 팩스
044-200-7972
-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 정부합동민원센터
서울특별시 중로구 사직로 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법조계·경제계 전문가와 ‘기업 위한 청렴윤리경영’ 간담회 개최

국민권익위, “기업들의 ESG 경영 및 국제 반부패 규범 강화에 대한
대응력 향상 기대”

(23. 6. 21.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기업의 환경·사회·거버넌스(ESG) 경영과 해외부패방지법 등 국제 반부패 규범대응 강화를 위해 법조계, 경제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단 간담회를 21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6월과 12월에 있었던 간담회 이후 세 번째 회의로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하 청렴윤리경영 CP) 개발에 참여해 온 반부패·ESG 전문가, 법조계·경제계 전문가와 기업인 등 총 20명*이 참석한다.

* (법조계) 양형위원회 양형위원,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경제단체)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업) LG전자, CJ ENM (반부패) 한국투명성기구, UNGC 한국협회 등 관계자

이번 정책자문단 회의에서는 향후 배포 예정인 기업용 청렴윤리경영 CP 안내서의 방향성 및 주요 내용에 대한 전문가 및 기업인들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안내서의 자율 준수를 위한 점검표, 준수 방법 등을 보완할 예정이다.

기업용 청렴윤리경영 CP 안내서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 반부패·ESG 관

런 규범을 효율적·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안내서의 점검표는 진단지표별 반부패 규범·지침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점검표는 6개의 진단영역*으로 구성돼 있으며 공시와 관련된 진단지표를 포함해 청탁금지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 기업은 이를 활용해 자율적·능동적으로 국제 반부패 지침을 준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CP 거버넌스, 정책 및 절차, 고위험 영역/제3자 관리, CP 문화, 모니터링 및 조치, 보고 및 기록보관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강화된 국제 반부패 규범에 대한민국 기업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이를 위해 청렴윤리경영 CP 시범운영,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보지인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도 매월 발간하고 있다.

※ 유럽연합(EU) 기업지속가능성 정보공시 지침(CSRD), 지속가능 금융공시 규정(SFDR) 등 국제 ESG 공시 기준이 강화되고, 2022년 5월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 워크(IPEF)가 선정한 4대 의제에도 '반부패' 포함

또한, 지난해 6월에는 공기업 등 공공분야를 위한 청렴윤리경영 CP 안내서를 배포했고, 청렴 노력도 평가지표와 연계해 공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부패리스크를 방지 및 개선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기업용 청렴윤리경영 CP 안내서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ESG 경영 및 국제 반부패 규범 강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적극행정국민신청’ 2년간 6천5백여 건 접수

국민권익위 “일선 현장 적극행정국민신청 담당자 간담회 개최”

(23. 6. 21.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적극행정국민신청제 활성화 및 업무발전을 위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업무담당자와 간담회를 개최한다.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국민신청제도가 시행된 2021년 7월 27일부터 올해 5월까지 총 6,571건의 국민신청을 받았다.

이 중 국민이 신청한 내용을 검토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총 417건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는 의견을 권고했다.

간담회에서는 처리 경험, 주요 시사점 등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적극행정국민신청제 활성화를 위한 일선 기관담당자들의 다양한 의견도 경청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를 위해, 국민권익위의 권고 의견에 따라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해당기관이 적극적으로 처리 중이거나 조치 완료한 주요 사례를 선정했다.

주요 사례는 ▲군에서 치료가 덜 끝나고 제대한 군인의 약제비 부담을 해소한 국방부의 처리사례 ▲▲도로변에 기울어진 전봇대로 인한 자연

경관 훼손 방지 및 교통안전 예방을 위해 신속하게 정비한 한국전력공사의 처리사례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문제로 인한 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한 수원시의 처리사례 ▲고등학교 통학버스 노선 부족 문제를 버스회사와 협력을 통해 해결한 창원시의 처리사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례의 처리 방법과 문제 해결방식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는 국민의 목소리를 우선 듣기에 국민의 관점에서 공공문제 해결에 적합한 해답을 찾아낼 수 있는 국민과 공직자 모두에게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 좋은 제도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삶이 더 행복해지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활성화되도록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경영 고충’ 상담받습니다!

20~21일 충남 당진시·경기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함께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23. 6. 19. 국민권익위)

경기침체와 물가·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지역주민의 고충을 상담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0일 충청남도 당진시 당진1동 행정복지센터, 21일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주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특히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지역주민의 고충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당진시·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시민고충처리위)와 협업해 진행된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고충이나 불편이 있어도 국민권익위를 방문하기 어렵거나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을 위해 국민권익위와 협업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맞춤형 상담서비스다.

국민권익위와 시민고충처리위는 현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불편은 바로 해결하고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해결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회복위원회도 협업기관으로 참여해 소상공인 경영지원·개인신용채무 등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한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 시민고충처리위와 함께 지역주민의 생활 속 불편과 고충을 세심하게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일정 〉

구 분	(충남 당진시) 당진1동 행정복지센터	(경기 평택시) 안중읍 행정복지센터
일 시	6. 20.(화) 10:00~15:00	6. 21.(수) 10:00~15:00
장 소	당진1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1층) (충남 당진시 당진중앙1로 33)	안중읍 행정복지센터 회의실(2층) (경기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 400)
대 상	소상공인, 지역주민 등	
협업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진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 고충민원 상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 경영지원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 고충민원 상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 경영지원 상담 • 신용회복위원회 - 개인신용채무 상담
방 법	현장에 상담장을 설치하여 고충 상담 실시	